

생활범죄팀 폐지…민생치안 공백 우려

광주·전남경찰, 올 상반기 인사서 인력 재배치

강력·경제팀으로 흡수…업무 돌려막기 불만도

경찰이 생활범죄수사팀을 7년 만에 폐지하면서 생활형 범죄 등 각종 민생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경제·사이버 수사 인력 충원이 필요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주변 범죄 수사가 또다시 강력범죄에 가려져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신규 증원 없는 돌려막기 인력 재배치 라며 생활범죄팀 폐지와 관련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4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생활범죄팀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광주·전남경찰청에서도 각 관서에서 운영 중인 생활범죄팀을 폐지하고, 인력 재배치 방안을 결정해 올 상반기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 5개(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구) 관서에는 총 24명이 생활범죄팀에 소속돼 있으며 각 관서마다 4~5명씩 배치돼 있다.

생활범죄팀 해체 계획에 따라 광주 각 관서의 인력을 강력·형사팀으로 일부 흡수하고, 나머지는 경제팀 등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또한 목포·순천·여수경찰서 등 3개 관서에 각각 배치된 총 14명의 생활범죄팀을 해체하며, 이중 2명은 목포서 강력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12명은 올 상반기 인사에 3개 관서에 강력·형사·경제팀 등으로 분할 배치할 예정이다.

2015년 도입된 생활범죄팀은 자전거·오토바이·스마트폰 절도처럼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겪지만, 다른 강력범죄에 가려 상대적으로 수사가 소홀했던 생활 주변 범죄에 초점을 두고 형사 활동을 해왔다. 또 사후적 형사 활동에서 벗어나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그러나 생활범죄팀을 도입할 때와 달리 최근 침입 강·절도 범죄가 많이 사라져 팀 도입 목적을 달성한데 이어 경제와 사

이번 등 수사 파트 수혈이 시급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청은 이같이 인력 재배치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있지만, 생활범죄수사팀 폐지 등과 관련해 내부에서도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행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2,052건으로 전년(1만 2,926건)보다 줄었지만, 생활범죄팀이 소화하는 일상 속 절도 등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청 한 관계자는 “생활범죄팀의 경우 소액 절도 등 경미 범죄를 당했으나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다른

수사팀과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또, 강도나 살인, 폭행, 절도 등 사건들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최근 경제·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생활범죄팀을 폐지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범죄팀 폐지 결정에 따라 일선 형사들 사이에서도 한정된 인력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형사범죄가 줄고, 수사환경이 달라진 만큼 결국 내부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고, 올 상반기 인사에 생활범죄팀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3단지아파트 재개발 공사장 펜스에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생훈 기자

전남교육청, 증·개축 학교 공사현장 특별점검

25일까지 16곳 대상
시공·안전 관리 중점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도내 16개 신설 및 증·개축 학교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사고 관련, 유사 사고 방지 위해 실시하는 이번 안전 점검은 외부전문가(건축사, 기술사)와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하굴착 흙막이, 가설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양생, 화재 예방 등 시공·안전·품질 관리의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

시 보완 조치하고, 구조체 또는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은 공사 일시 정지 등 결함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장석용 교육감은 이날 여수 동중초등학교 신설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교육 기족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구현되도록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나라 기자

경매 교육 [특수전문반]

- 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자)
- 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

| | |
|----|---|
| 광주 |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
| |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
| |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
| |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
| |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

| | |
|----|--|
| 전남 |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
| |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
| |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
| |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
| |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

| | |
|----|--|
| 시외 |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
| |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
| |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
|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
| | |

010-6670-9800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응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입주 시비 없음)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신축)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 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응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응25억)

010-6670-9800

대법 “광주청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 위법” 영장 효력 사라지면 재판서 증거 사용 불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이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를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강력부는 A경위의 휴대전화 자료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기록 등을 찾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A경위는 “검찰이 집행 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해왔다.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변환해야 하는 원칙도 무시했다”며 압수수색 위법성을 주장했다.

A경위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조합비리 수사 과정에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1월 비위 관련자인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16년 11월 알선수수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도 받는다.

특수부는 2019년 7월 광주경찰청이 송치한 법조인과 다른 경찰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보한 후 이를 통해 확보된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020년 4월 A경위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특수부가 보관하고 있던 A경위의 휴대전화 복원 자료를 압수했다.

특수부는 2019년 7월 광주경찰청이 송치한 법조인과 다른 경찰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보한 후 이를 통해 확보된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A경위는 “검찰이 집행 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해왔다.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변환해야 하는 원칙도 무시했다”며 압수수색 위법성을 주장했다.

A경위는 2020년 6월 15일과 8월 31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법률 상담을 하면서 범행 재연을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으며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을 교체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일부 인정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관계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지방세증명 등이다.

다만, 미발급되는 제 증명도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도 급하게 볼 일이 있는 주민들이 365일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면 서 대단히 감사해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